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

2016~2021

2021

든든한 디딤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철준

그동안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5년 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시민이 권력이나 자본의 오만과 횡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건, 사건의 해결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사건을 공익인권사건이라 칭하고 변호사들이 모여 고민하고, 연구하며, 함께 사건을 해결하자는 것이 당시 우리 변론센터의 설립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5년간 280여 건의 소송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정해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변론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육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소송을 통해 밝혔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인권과 정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 만나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지켜야 하는 공익과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공익변호사의 광장'이자, 선배들과 동료들의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나누며, 연구를 통해서 이를 심화시키는 '공익변론의 아카데미'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지해주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며, 소소하나마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공익변호사의 든든한 후원군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더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 속에서 보다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사랑, 후원을 듬뿍 받는 조직으로서 재정적으로도 튼튼한 기반을 쌓으려 합니다. 우리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이자 인간다운 삶의 든든한 디딤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우리 변론센터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더욱 더 의미있는 공익인권의 봉사와 도약을 기대합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 전 대표
유남영

먼저 설립 5주년을 축하합니다. 장한 일이지요. 우리 회원들이 귀중한 시간과 성의를 투여하여 이룩한 성과입니다.

센터가 지난 5년을 지속했으니 앞으로 10년도 가능하겠지요.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기금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기금의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일에 더 지혜를 모아야겠지요.

우리 민변과 센터가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일입니다. 센터가 선택, 지원한 사건 이외에도 우리 회원들이 담당하는 각종 사건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를 재미있게 구성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더 창조적인 방안과 채널이 없을까요? 이 채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다룰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기성언론이 취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열성 팬을 확보할 수는 없을까요?

또한, 센터와 외견상 비슷하게 공익인권사건을 수행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이들과의 관계 및 변론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민변다울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센터가 설립 취지대로 앞으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공익과 인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우리 회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이론과 실무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주년을 거듭 축하하고 앞으로 더욱 더 의미있는 공익인권의 봉사와 도약을 기대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설립 배경

민변은 1988년 설립 후 대표적인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공익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권 현안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공익변론을 전문적으로 연구,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2016년 4월 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하며 280여 건의 공익인권변론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전통적인 인권변론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변론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사건, 국가보안법 형사재심 사건이 있고, 세월호 특조위의 강제해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조사관 보수지급 소송, 낙태죄 헌법소원, 개신교 대학의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소송, 수용자 권리구제 소송,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가진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배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이 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변론활동의 기반이 될 연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은 집회의 자유 등 전통적 주제는 물론 최근 코로나19와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시의성 있는 인권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축적된 판결문, 논문, 토론자료집, 교육자료 등을 디지털 도서관에 축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도서관 자료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대표 김철준 변호사
소장 이상희 변호사
상근자 최용근·서채완·
조은호 변호사, 이수연 간사



운영위원

김철준·조수진·송상교·위은진·
오민애·서희원·이상희 변호사
민주법연 노현수
인권재단사람 정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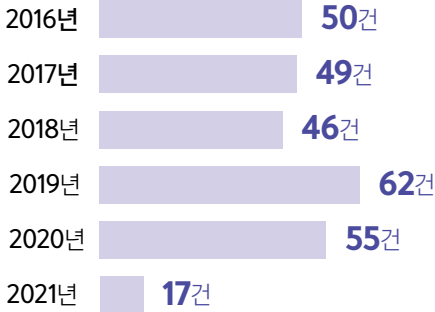


연구모임

사회권 연구모임,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재외동포 연구모임,
국가 손해배상청구 대응모임, 공익인권소송 소송비용 대응모임,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센터가 5년간 지원한 사건 수 **279건**

연도별 건수



사건별 건수



확정 사건 **158건**

헌법 12건

승소 7건

패소 5건

민사 28건

승소 14건

패소 13건

소취하 1건

행정 40건

소취하 8건

승소 19건

패소 12건

난민신청 1건

형사 67건

유죄 23건

무죄 23건

가해자 유죄 1건

기소중지 2건

불기소 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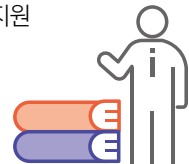
상담후 종결 1건

선고유예 8건

기타 1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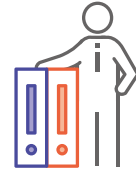
- 국가보안법 변론기록 분석작업 실비 지원
- 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행사 후원
-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 기금 지원
- 센터명의 집회 주최
- 유엔 진정

- 인권위 진정 2
- 균형법 전문가의견서 비용 지원
- 준항고
- 시민 배포 책 제작
- 균형법 해외판례번역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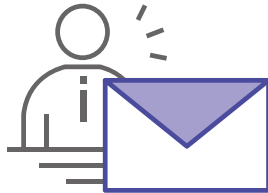


사건 영역

| | | | |
|-----------|------------|------------|------------|
| 과거사청산 11건 | 노동 15건 | 수용자 인권 9건 | 표현의 자유 31건 |
| 교육 3건 | 동물권 1건 | 아동인권 2건 | 환경보건 6건 |
| 국가보안법 20건 | 민생 12건 | 언론의 자유 1건 | |
| 국제연대 3건 | 사법 3건 | 여성 14건 | |
| 국제통상 4건 | 사회권 6건 | 정보인권 18건 | |
| 군인권 5건 | 생명과 안전 11건 | 집회의 자유 47건 | |
| 기타 18건 | 소수자 인권 24건 | 참정권 15건 | |



변론을 지원 받거나
상담을 받은 시민 수



5,476건

3억 원

연평균 6,000만 원



변론센터가 지원하는
변론기금 총 액수

한 눈으로 보는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

공익인권변론소송

회원의 공익인권변론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 공익인권기금 지원, 월간변론, 민변
변론 매뉴얼, 공익인권변호사단

공익인권 연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인권
변론을 기획합니다.

- ↳ 사회권 연구모임, 해외입양소송
연구모임, 코로나19와 인권 연구
모임, 공익소송비용 연구모임,
디지털 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 ↳ 인터넷 상담, 구금서신,
펼지마 형사 절차

- 통신자료 위헌 소송(제1호 사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확인을 위한
조사관 임금청구 사건
- 교육대학교 수시 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기소 사건

2016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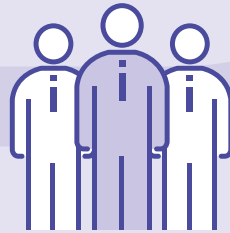
- 고양저유소 풍등화재 사건
-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 HIV 강제검사
국가배상청구 사건
- 장신대 부당징계 무효확인 사건
- 군영창 위헌제청 사건
- 카카오 압수수색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7년



-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청구 사건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자활근로자 사망 국가배상청구 사건
- 용산기지 환경오염조사 정보공개청구 사건
- 균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
-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른 주민 소송 상고심

- 해외입양 국가배상청구 사건
- 인도적 체류자 테러방지법 기소 사건
-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 세월호 진상규명 국민 고소·고발
법률 지원 사건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상고심 지원



2018년

2020년



- 한신대학교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헌소원 사건
- 경비노동자 괴롭힘 사망 민형사 변론지원 사건
-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소송
- 인공지능 알고리즘 정보공개청구 사건

10대 선정 사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5년 동안 280여 건의 소송을 공익인권변론 사건으로 지정하고 변론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시민의 숫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 변론센터에서 지원한 공익인권변론사건은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 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며, 디지털 정보화시대 정보인권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의 인권문제를 대비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변론센터 5주년을 맞아 그동안 변론센터에서 지원했던 280여 건의 공익인권변론사건을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짚어 소개해볼 만한 주요사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10대 공익인권변론사건'과 '앞으로 주목할 5대 공익인권변론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은 ①공익성 ②지원필요성 ③성과 및 제도변화 ④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되 선정 위원 각자의 관점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선정하였으며, 위원들의 복수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이 선정된 사건 순서로 1차 선정하고, 동수 득표인 사건은 위원들의 치열한 상호 토론을 거쳐 최종 선정

10대 주요 사건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앞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건을 앞으로 주목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음

10대 선정 사건

고한솔

기자 | 한겨레21

취재를 하면서 접했던 사건보다 훨씬 다양한 사건들을 변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온라인 공간에 잘 정리되어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 회원

민변의 공익변론은 사회운동의 과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혜

교수 | 강릉원주대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공익인권변론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수자 인권문제를 발굴하고 과거에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 영역의 소송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랄라

활동가 | 다산인권센터

자료들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정대상 사건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사건들 중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도 많았고, 이런 부분은 활동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멀리는 국가보안법, 재심에서 최근에는 개인정보, DNA, 도청 등 국가폭력의 사례들이 소송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든든한 백으로 함께 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쓰

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특히 집시법 제 11조 폐지를 비롯한 사건기획 등 민변과 시민단체가 서로 긍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영선

변호사 | 회원, 부회장

변론센터에서 지원한 사건들은 민변의 역사가 담겨 있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선정된 사건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변론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성수

교수 | 숙명여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민변 회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민변 이외에 다양한 법률구조 제도가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 변론센터만이 할 수 있는 소송이 무엇인지를 찾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

1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자살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을 받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근로능력은 세심하게 판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심장질환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던 한 수급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 일을 시작한지 수개월 만에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근로능력을 조건으로 수급을 결정하는 조건부수급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일을 강요한 공공기관(국가, 국민연금공단 등)의 책임을 묻기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영국의 유명한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소재가 되어, 이 사건은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켄 로치 감독의 응원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당하게 운영되었던 조건부수급제도의 문제점과 국가의 책임을 드러낸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올해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

임신중단 형사 처벌, 여성인권 침해 낙태죄 위헌 결정

당사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69조 제1항(여성의 자기낙태죄),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이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산부인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17. 2. 8. 하였습니다.

임신중단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1953년 법이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계속된 오랜 악법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을 형사처벌을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임신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8명이 참여하여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이번 대리인단은 기존 결정을 뒤집어 7명 재판관의 위헌의견(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을 이끌어 내 결국 제도 변화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올해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0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

3

무지개 연대는 정당하다 한동대·장신대 부당징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독교 재단 소속 대학에서 학생들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무지개 색 옷을 입고 종교행사에 참여했거나(장신대학교) 학내에서 동성애 및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한동대학교)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을 무기정학 등으로 징계한 사건입니다. 변론센터는 부당징계의 무효확인 및 가처분 소송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징계는 모두 취소되었고, 일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연대를 요청하는 소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기관이나 군대 등 국가기관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론센터는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2019년 10대 디딤돌 사건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4

군 영창 사라지다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 및 피해자 법률 지원

변론센터는 군대 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구금시설인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법률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군 영창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서 본부 뿐만 아니라 지부 소속 회원들과 신속하게 팀을 이루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집행이 끝나는 영창제도의 특성에 따라 최초 사건이 접수된 이후 1~2일 이내에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인단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부분 영창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2020. 7. 영창제도가 폐지된 군인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위헌적인 군 영창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2020. 9. 에는 영창제도를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10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

5

끝까지 간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위헌 소송 및 재심 사건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활동은 민변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공익변론의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비해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기소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소속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여전히 찬양고무죄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변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원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이 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심리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공익변론 지원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신청 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6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위법확인 및 피해자 법률 지원

4·16 세월호 참사가 7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참사 직후 세월호 참사 대응TF를 구성한 이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밝혀낸 판결입니다. 변론센터는 특조위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강제해산 이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조사관들을 대리하여 보수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8. 특조위를 해산한 것이 위법하므로 조사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소·고발 사업,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세월호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자료집 발간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

7

차별의 문턱을 없애라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입학 차별 위한 결정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검정고시 출신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을가요? 이 사건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 문턱을 없애기 위한 사건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 중 교사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원의 50%를 뽑는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전국 교육대학교는 신입생 수시모집 입학전형에서 이들의 지원자격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변론센터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적극 참여하여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기고하는 등 당사자와 대리인 사이에 협 업이 빛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 지원 기회를 박탈 한 것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8

UN인권규범 판결에 당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 HIV검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부당한 인종차별을 거부했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원어민 영어교사로 일하 던 A씨는 매년 재계약 시점에 반복적으로 제출한 서류 중에서 HIV 검사 결과 관련 서류가 한국인 계약직 교 사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외국인 교사에게만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외국인 교 사에게만 HIV 검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된다며 서류제출을 거부하였고, 이후 해 고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절차를 거쳐 한국 교육부의 HIV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권고에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A씨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A씨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A씨 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HIV검사 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거 시점이 아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시점 을 비로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배상액도 상 당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기구의 개인통보 결과가 국내 판결에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는데,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책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멸시 효 기산점 판단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적용을 확산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

9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찾다 주민 갑질 경비노동자 사망 사건 법률 지원

강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주민의 장기간 갑질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평행주차되어 있던 주민의 차를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주민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 명예훼손, 협박성 발언과 문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공갈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마을과 주거공간까지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센터는 이 사건이 가진 사회적 의미에 공감하고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여 여론을 확산시키는 한편, 민사/형사/산업재해청구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10

정보기관 감청중독에 제동을 걸다 시민단체 활동가 패킷감청 위헌 결정

변론센터는 출범과 동시에 첫 기획소송으로 정보기관(경찰/국정원/검찰 등)이 당사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받아 수집해 온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1호 공익사건으로 기획하는 등 정보기관의 시민에 대한 정보수집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민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은 헌법에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본인 명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패킷감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공익변론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2011년 처음 소송을 시작하였고, 이후 개인사정으로 새롭게 대리인단을 재구성하게 되면서 변론센터는 모임 내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들 및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지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은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며 이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7년 만에 그 위헌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10대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5대 사건

1

인공지능 알고리즘 정보공개청구 사건

인공지능(AI)을 채용과정에 도입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020년 7월, 채용 절차에서 시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13곳을 대상으로 시면접 사용 및 도입 경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편향과 차별발생유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준수 등 실태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문제에 서와 같이 인공지능은 그 사회 주류의 논리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지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정보인권관련 기획소송으로서 향후 진행 경과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과거사 문제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문제는 모임에서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구성된 강제동원소송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200여 명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중 40명의 피해자에 대해 2019년 한국법원에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3

위법한 해외입양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사건

과거 해외입양이 아동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양기관의 이익을 고려하여 반인권적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송으로, 한국정부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입니다. 1979년 당시 위법한 호적 창설과 그에 대한 감독의무의 부재,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대리입양 제도'의 운영, 국적취득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입양기관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으로 앞으로 결과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5대 사건

4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비용부담원칙 제도개선 및 법률 지원

공익소송은 최초의 선례를 만드는 사건인 경우가 많아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예외 없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통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도 패소를 하여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공익소송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집한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문제를 지적하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원고에게 총 932만 100원의 변호사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헌법소송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토론회, 관련 규정의 개정 입법 운동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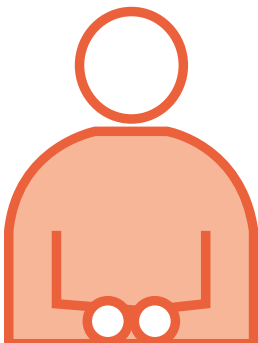
5

성적지향을 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위헌 소송 사건

이 사건은 오랫동안 법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군대 내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진 동성간 성접촉 행위에 대해서 '추행'으로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 소송입니다. 2017년 첫번째 위헌제청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상황에서 최근 2020년에 다시금 법원에서 위헌 제청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대 내 합의에 의한 성접촉 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6 중 '밖의 추행'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였고, 변론센터는 이 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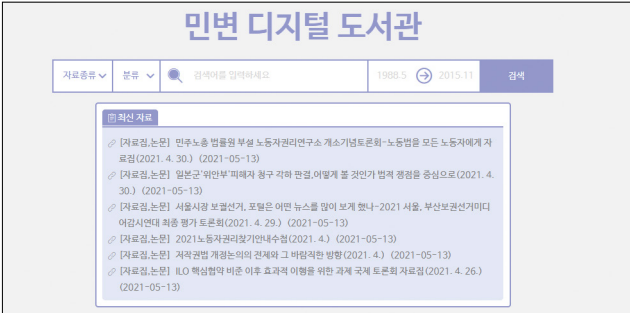
2016~2021년 주요 변론사건

- 한미FTA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
- 메탄올 실명 노동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 용산기지 환경오염조사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
- 주한미군 세균반입 관련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
- 용인 경전철, 왕산마리나리조트에 대한 주민 소송
- 시민단체의 생리대 유해성 발표에 대한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
-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기준 헌법소원
- 코로나19 재외선거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화죄 형사사건
- 해군 상관에 대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상고심
- 수형자 선거권 박탈 위헌 소송
-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 활동지원 배제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
- 대한항공 지연발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도서관이 도서열람 제한처분 취소 행정심판
- 성별이분법에 따른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시민법정 지원
- 인천애들 앞 광장 집회금지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삼청교육대 강제수용자의 국가배상청구
-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4조에 대한 위헌 소송
- 보호관찰처분 취소 소송



공익인권변론의 허브 ‘디지털 도서관’

민변 디지털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익인권변론 분야에 관련된 주요 판결, 서면, 연구 자료, 교육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본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론매뉴얼, 변론기, 국제인권자료, 질문과 답변 등 회원들의 공익변론을 위한 특정서비스 또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총 자료 건 수

5,342건

자료집, 논문

1,518건

판결문

2,099건

단행본, 정기간행물

508건

서면 등 변론자료

321건

교육자료

24건

(2021. 3. 26. 기준)

공익인권변론의 소식지 ‘월간변론’

민변 회원들이 수행한 사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매월 둘째 주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및 인권자료와 더불어, 변론매뉴얼, 변론꿀팁, 변론기 등 공익인권변론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는 월간변론 편집위원들의 판결 및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기고글을 공유드리고 있으며, 해당 기고글은 오마이뉴스에 지속적으로 연재중입니다.



총 발송 건수

90호

클릭율(평균)

15%

발송율(평균)

96.7%

*오픈율 대비

(2021. 3. 26. 기준)

오픈율(평균)

25%

**공익인권변호사단 2기
제1차 모임**

<수사초기단계대응 실무교육>

강사: 최정규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 고양 풍등화재 사건 변호인)
일정: 2020. 11. 13.(금) 19:00, 민변 대회의실



공익변호사 역량 강화 공익인권변호사단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회원이 민변의 일상적인 공익인권활동에 참여하고, 긴급접견을 지원하며 변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유받을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부터 운영된 1기 공익인권변호사단의 활동에 이어 공익인권변호사단 2기가 2020년 9월에 운영중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변호사단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①변호인 접견 요청 ②변론사건 검토·참여 요청 ③변론교육, 사례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긴급 접견 지원 건수 : 216건(1,100여 명)

> 주요 일상적 공익인권변론사건 등 연계 (2021년)

- 국립대학교 성추행사건 법률 지원 연계
-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청구 사건 지원 연계
- 부산 경리계 직원 부당징계 및 해고 사건 연계
- 암피해자에 대한 집회괴롭히기소송 사건 연계
- '유서대필 조작사건' 변론백서 기획단 연계

> 주요 공익인권변호사단 대상 교육

- 수사초기단계대응 실무 교육
(강사 : 최정규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단

- 1기** 하주희 이용우 임선아 송아람 김동현 조혜인 신윤경 신수경 정치균 이정환 이혜정 조애진 전민경 고윤덕 정진아 장종오 조영관 김종귀 최용문 심재섭 황준협 이상희 박인숙 이형준 김소리 이동구 김동창 최석균 정민영 강보경 손명호 전범진 강을영 구정모 이혜선 김우중 장석우 김제왕 김형일 김성주 정병욱 최용근 김영주 김희진 이주한 송상교 한가람 이소아 박삼성 오현정 이종희 서선영 천지선 류민희 김종보 안현지 조아라 권호현 김경은 양성우 김자연 하인준 김진형
- 2기** 이용우 이근욱 조은호 최정규 박한희 권석현 조세현 신윤경 조덕상 전정환 황호준 정진아 박병인 조영관 류다솔 김연지 김범준 이상희 서보건 나대현 최석균 송진성 전범진 이상현 구정모 김지연 최정규 오민애 최용근 김영주 박삼성 허자인 박천우 오현정 이윤주 천지선 정명화 이희영 양성우 박지현 하인준 김태환

새로운 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공익인권소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연구모임

민변이 2019. 2. 개최한 오사카 국제인권기행을 계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왕래 및 지위 개선, 인권침해에 대한 변론지원 등을 기획·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권 연구모임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사회권 관련 주요 국내정책의 연구, 사회권 관련 공익소송 기획, 국제인권규범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집회의 자유에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 모임입니다. 외국의 집회 관련 주요 판결 연구, 집회 관련 기획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국가 손해배상청구 대응모임

노동자, 집회 주최자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모임입니다. 손잡고,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소송비용 대응모임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면 다수의 경우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한 소송대응,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공익소송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

수용자는 과밀수용, 도서반입제한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모임은 수용자 인권 침해 현안에 대응하면서, 관련 법제와 판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코로나19는 정보인권의 침해, 과잉처벌,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하에서 인권의 원칙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의 길잡이가 될 다양한 변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변호사 대상 연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전자소송과 리서치의 실제, 서면 작성의 실제, 증거의 발굴, 구두변론방법, 소송기록을 통한 재판실무 등 신입변호사를 위한 단기집중연수를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회원 대상 연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디지털 포렌식, 허위자백에 대한 법심리학적 이해 등 회원들이 공익인권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실무적 교육을 수시로 진행해 왔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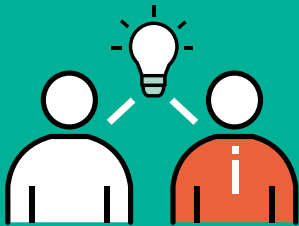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차세대 공익인권소송의 주인공이 될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동/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옆에서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구금서신과 이메일(pipc@minbyun.or.kr) 등을 통해 접수된 공익·인권침해 제보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공익인권변론사건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익인권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마중물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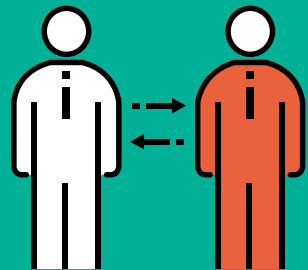
시민의 마음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시민의 형사절차를 지원하는 '자기변호노트'를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시민에게 생소한 형사절차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짚지마 형사절차」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권 침해에 맞서, 다양한 공익·인권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까이

SNS(페이스북)를 통해 공익인권변론센터의 활동과 공익인권소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① 진보네트워크센터 X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들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기금 지원과 변론으로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한국 시민사회의 정보인권 운동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의미 있는 싸움을 함께 해왔습니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사건은 위헌 결정이라는 성과에 이르기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시면접 정보공개 소송,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소송, 이태원 접속이력정보 대량제공 소송처럼 정보인권 운동이 신기술 환경에 도전할 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기금 지원과 변론으로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물론 소송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파업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디엔에이를 채취한 사건은 또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후로도 국가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 주지 않아 또 다시 헌법소원 중입니다. 갈수록 공익소송을 위촉시키는 패소비용 제도도 함께 바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의 세계 속에 정보인권이 길을 잃을 때 손을 잡아주었던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을 축하드리고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②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센터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센터에서 제안한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임은 수형자 선거권 헌법소원,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국가배상청구 소송,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도서반입 제한 법무부 지침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여러 사건에서 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통선거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년 이상 실형 선고 수형자의 곁에 센터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부른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교정시설, 그럼에도 실내 온도 기준조차 없는 교정시설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도 센터 덕분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고 싶다면 그 사회의 감옥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센터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변론기금> 모금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③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앞으로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팀장 김남주입니다. 저희 TF는 2017년 민변 집행위원회 인준을 받았고, 이후 한베 평화재단 등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2018년 시민평화법정,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국가배상소송 제기, 2021년 국정원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계속되었지만 제도적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저희 TF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과 연대로 이 문제의 해결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TF가 2018년 시민평화법정을 한국 시민사회에 제안하고 추진해나갈 때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든든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을 축하드리며, TF에서 진행하는 국가배상소송 역시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낙태죄 위헌 소송 대리인단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구축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낙태죄 위헌 소송 대리인단 단장 변호사 김수정입니다. 낙태죄는 오랜 세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태아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한 채, 국가의 인구조절 필요성 등에 따라 유지되어 오면서 여성의 권리만 침해하여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8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변호사들(김수정, 차혜령, 류민희, 박수진, 유원정, 천지선, 최현정)은 낙태죄 위헌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치열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4월 여성을 옥죄던 굴욕적인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낙태죄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리인단이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항상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의 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구축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⑤ 장훈(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 아빠)

변함없이 어렵고 힘든 약자의 편에 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개소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의 아빠 장훈입니다. 참사 후 7년의 시간 동안 민변은 우리 유가족들의 곁을 항상 지켜주던 친구였고 지인이었으며 동지였습니다. 민변의 동지들 중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고소·고발과 재판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항상 고맙고 항상 존경합니다.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삼촌과 이모로 여러분을 기억 할 것입니다.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어의 판결에 여지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렵고 힘든 약자의 편에 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변론기금 조성에 동참해 주세요

민변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현장과 법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민변을 넘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시민변론기금은 그 길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만든, 오직 시민을 위한

시민변론기금 참여방법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이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후원문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화 070-5176-8161 | 팩스 02-522-7285

이메일 picp@minbyun.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578601-01-17375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원방법

시민변론기금 일시후원 약정서 작성 웹페이지

siminfund.or.kr

※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위 후원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처리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

2016~2021